재보선 공천 때문에 …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송영길, 박주선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기 다른 표정으로 4월 재보선 공천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이냐, 부평을이냐” 鄭 어디로

〈전주 덕진〉 〈전략공천〉

민주 전주 덕진 전략공천 결정

“충돌 땐 공멸” … 타협 가능성

민주당 지도부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전주 덕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당내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통해 정동영 전 장관을 전주 덕진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전 장관은 당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인천 부평을로의 진로 수정, 무소속 출마 강행 등 정치적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

18일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9일부터 시작되는 후보 공모를 앞두고 전주 덕진과 인천 부평 을 등 2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전략공천이란 후보 공모 절차 없이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후보를 낙점하는 방식으로 최악의 경우, 정 전 장관은 공천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김유정 대변인은 회의 직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전략공천 카드를 제시한 것은 정 전 장관의 지역구 유-턴을 통한 호남 텃밭 출마가 수도권 표심 등 전체 재보선 판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전략공천 카드로 확고한 ‘공천 불가’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 전 장관이 귀국 전에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과거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분열한 전력이 있는 정 전 장관이 또 다른 분열을 의미하는 무소속 출마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전략공천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공은 이제 정 전 장관에게로 넘겨졌다는 평가다. 정 전 장관은 당 지도부가 전주 덕진 출마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인천 부평을로 진로를 바꾸거나 탈당을 통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 부평을의 당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다 무소속 출마도 ‘분열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덧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정 전 장관 측은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결정에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일단 원내외 인사들과 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가 귀국하는 22일 이전에 전주 덕진 공천 문제가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주 덕진 출마를 놓고 당 지도부와 정 전 장관 측이 정면충돌한다면 공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3~4일 동안의 기간 동안 상호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특히, 양측의 충돌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극적인 타협책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장관 측에서는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통해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섞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 “재보선, 경제 살리기로 치를 것”

이희범 전 장관·이윤호 장관 등 전문가 영입 추진

한나라당이 ‘4·29 재보선’을 위해 경제전문가를 영입하기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번 재보선은 철저하게 경제살리기 선거로 치를 방침”이라며 “특히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구의 경우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핵심 당직자도 “박희태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깜짝 인물을 데려오는 방안도 생각하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전문가를 영입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직 공심위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구의 경우 전략공천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입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전 무역협회 회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부평을 위해 대우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야당의 공격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경제 살리기 선거’라는 모토를 내세워 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인천 부평을의 경우 GM 대우 공장이 위치해 있고 울산도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경제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중량감 있는 인사 영입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도 부평을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의 출마 얘기가 거론되고는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경률 사무총장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김 특보는 당의 원로이고 유능한 분”이라면서도 “그런데 본인이 부평을에 한다 안 한다 말씀이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은 김 특보와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됐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별 후보자 압축작업 및 전략공천 지역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두언 “이재오, 때가 되면 역할해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때가 되면 역할해야 한다.”며 이재오 역할론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18일 KBS라디오에 출연, “정권창출에 크게 기여한 분이고 소중한 한나라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 복귀에 대해 “본인이 당분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의 대북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 “지금 북한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 특사 파견은 순서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광폭 행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전 부의장은 누구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성공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묵묵하게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선언’에 대해 “야당이 강해야지, 여당도 강해진다”면서 “야당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평가를 피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효석 의원 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나서

토론회 개최·법 개정안 추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농촌체험교육 활성화를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농촌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농촌체험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법률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김용근 교수(조경학)가 ‘농산어촌체험교육과정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정윤정 지역아카데미 교육농장센터장, 박정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생활지도팀장, 김완수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장, 박영일 농협중앙회 농촌사랑추진단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이날 사회 각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체험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농촌체험교육을 국가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2세들에게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초등학생들만이라도 일정기간 농촌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규개정 및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필리버스터 도입 법안’ 당론 발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박상천 의원이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타협추구형’ 국회 운영 차원에서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이르면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한 것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 시도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표결 전 여야간 협상 방식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조정절차 기간 의원들의 발언 횟수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토론’을 허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적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 요건을 현행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에서 ‘재적 5분의1 이상 요구’로 완화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8일 “다수 세력이 충분한 심의없이 일방처리를 시도하다 보니 야당이 몸으로 막는 사태도 발생한 것”이라며 “국회 의사진행의 합리화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